

송영길 ‘리더십 교체’·정청래 ‘진보 결집’·김민석 ‘투표율’

**막 오른 민주당 당대표 경선
‘승부처’ 충청권 표심 향해 촉각
첫날 서버 오류, 투표시간 연장**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경선이 28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송영길·정청래 후보는 충청을, 김민석 후보는 경남을 찾아 권리당원 표심 잡기에 열중했다.

민주당은 28~29일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권리당원의 뜻을 모은다. 첫 이틀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31일 ARS투표를 통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의 투표를 70%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해 당 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8월1일 충남·충북·대전·세종 지역에서, 8월2일 울산·부산·경남에서 합동연설회를 치른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세 후보는 이날 당 대표 후보로서 본인의 장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는 충주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열고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너무 저조한 결과가 나왔고 충주를 비롯해 서울시장, 부산 북구갑, 평택이나 경남 (등) 꼭 이겨야 할 곳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십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 아니겠나.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당원 여러분이 결단해줄 수밖에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형이 나와서 곧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



상된다. 다음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 있는 당대표 얼굴을 정청래로 할 것인지, 송영길로 할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부연했다.

정청래 후보는 세종시 해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 당원 간담회에서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후보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이재명 대통령 시즌2’ 민주 정부가 구성돼야 AI(인공지능) 문명사적 대변화가 계승되고 지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운을 띄



웠다. 이어 “그러려면 우리 내부부터 단결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총단결하고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내란 직후에 치러지는 대선도 이 대통령이 50%를 못 넘었다”며 “그래서 당 밖으로는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을 추진하고 다른 진보 민주 세력과 손잡고 연대해 민주당을 더 키워 총선 승리하고 대선 때는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를 찾아 정 후보의 고향인 충청권에

서 순회 경선이 시작되는 것을 거론하며 “혹자는 이번 선거의 시작이 특정 후보와 연고가 좀 강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강한 지역에서 끝난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한마디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걸 별로 개의치 않는다. 반드시 승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번도 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이번 당원투표와 전당대회 목표는 모든 당원들이 전원 투표하는, 그래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100% 당원 투표가 돼야 하기에, 당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첫날, 투표 사이트 서버 오류로 온라인 투표가 한 시간 가량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은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시간만큼, 충북과 충남 권리당원 투표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조정식 “내년 중후반 개헌안 합의 목표”

**국회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현직 대통령 연임도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형 선거가 없는 2027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을 두고선 “결국 주권자인 국민 선택”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10차 개헌을 매듭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의장은 “개헌 문제가 정략적이거나 정치적 이해가 개입됐던 것은 특히 선거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를 앞두고 논의가 이뤄져서 그랬던 것”이라며 “내년이 선거가 없는 시점이어서 개헌을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용과 로드맵을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에 준비시키고 적정 시점에 여야와 함께 개헌특위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며 “개헌특위가 언제쯤 출범할 지 단정할 수 없지만, 내년 중후반 최종 개헌안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특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하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개헌의 주요 반대 이유로 거론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의 처리 목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남용의 폐해는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방향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원칙인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가 제기됐고 반드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를 여야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을 저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를 보고 형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 지 판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노동자 출신’ 한-브라질 정상, 연대 다짐

李 “노동자의 정체성 잃지 말아야”

브라질을 국민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아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지난달 중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6주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거론하며 “저나 룰라 대통령께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 서두에서 “(룰라) 대통령님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며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왼팔을 다쳐서 현재 장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민 방문은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민 방한으로부터 5개월 만의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삶이나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더욱 압도적인 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또 28일부터 상파울루를 방문하는 데 대해 “(룰라)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일했던 급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볼 생각”이라며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의 현실을 잊지 않고, 또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왔던 그곳에서 대통령의 꿈을 한번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산업기술·우주·에너지 등 MOU 7건 체결

》1면 ‘李, 브라질 국민방문’서 계속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실무그룹을 설치해 양국의 민감한 부분들을 발굴할 것”이라며 “브라질의 부통령을 지정해서 실무그룹의 장을 맡도록 했다. 이 대통령께서도 정책실장을 실무단의 대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방산과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정부의 철학을 룰라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룰라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체결한 MOU는 모두 7건이다. 구체적인 MOU에 서명하고 영화, 사이버보안 협력 등 2건은 별도 서명했다.

회담을 마친 후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교민들과 오전 간담회를 한 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해당 행사엔 류진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등 한국 기업인이 참석한다. /서예진 기자

국힘, 조정태·권영진·진종오 징계 착수

“엄정 징계” vs “기회 줘야” 이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조정태(6선·부산 사하을),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진종오(초선·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28일 당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상임위원장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적식 원내대표의 명살을 잡는 등 해위로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인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같은당 박덕흠 부의장 후보 낙선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진 의원은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도운 것이 징계 사유로 거론된다.

특히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부친 세 의원은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권 의원은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이고, 조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진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계(친한동훈계)

로 여겨진다.

당 내부에선 이들의 징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권 의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책임은 엄격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지면 정당은 존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희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권 의원이 원내대표실에서 보인 언행은 분명 잘못”이라면서도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